

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의료…중앙정부 권한 이양”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지역의료 혁신 속도감 있게 추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관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는 직인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도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이 유지할 직인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난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 개 전시부스를 통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또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난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 개 전시부스를 통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또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힘, 김포 편입 ‘서울 키우기’ 속도전

추진 기구 발족·이번주 특별법 발의 민주당 ‘총선용 국토 갈라치기’ 맹비난

국민회의는 2일 ‘김포 서울 편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특별법 발의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바꾸는 행정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중앙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당원협의회별로 수도권 전역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포뿐 아니라 향후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로 편입하는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당내 담당 기구 발족에 입법 준비, 여론조사까지 동시다발로 속도전에 나선 것은 총선이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 민심 공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도부는 이날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요구 때문이라는 ‘명분’을 일제히 부각하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 편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

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우선 이날 발족한 ‘수도권 주민편의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태 의원)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입법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 대표 발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후 원하는 지자체가 나올 경우 추가로 특별법을 내는 형태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특위 명칭을 김포시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봉, 중랑, 노원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외곽의 반발이 커지면서 표심 이탈을 가속해 선거 전략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비롯한 국민회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더욱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불가론으로 기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판단과 함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하는 유권자도 다수라고 보고 여당이 주도하는 이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힘 징계 취소에...이준석 “지지율이나 올려라” 홍준표 “메뚜기 한철”

김재원·김철근 당원 자격도 복원

국민회의가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회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 (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당내 사면을 공식 제안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대사면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혁신위 1호

제안인 만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준표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부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

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남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당원권 정지 징계가 취소되자 당 지도부를 향해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국민회의가 징계 취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별로 할 말이 없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라고 짧게 답했다.

홍 시장은 최고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하기야 시한부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국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친윤 핵심 이철규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영입 작업을 주도할 국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사무총장을 지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회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의원은 직전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해 왔으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자진 사퇴했다.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당내에서는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임명직 당직자

사퇴한다더니 다시 슬그머니 한 달도 안 돼 들어오는 걸 보니 ‘사람이 없군, 먹고살 만해졌다고 생각하나 보군, 역시 노답’ 세 가지”라며 “오늘 인선 보고 대부분 그제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은아의 의원은 페이스북에 “끝까지 핵심 기득권은 놓지 못하는 살전 고양이들의 몸부림이다. 이번 인사를 보니 김기현 대표님 내려오셔야 할 것 같다”고 썼다.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